

『인권연구』 6(2): 327-366.

Journal of Human Rights Studies 6(2): 327-366.

DOI: <http://www.doi.or.kr/10.22976/JHRS.2023.6.2.327>

[일반논문]

대학생들의 학내 인권침해 피해 및 인권상황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가설적 설명모델의 검증* **

이 민 식***

한글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학내 인권침해 피해 및 인권상황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하였다. 특히, 대학 및 대학생이라는 조직과 지위 상황이 갖는 특성들을 중심으로 가설적 설명모델을 구성함으로써 학생들의 자기 인권 보호수준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들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19)의 ‘대학 내 폭력 및 인권침해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로부터 생산된 설문 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AMOS 구조방정식에 의한 구조모델의 분석 결과, 학생들이 대학 생활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은 학교 소속감을 약화시키고, 인권침해 피해를 증가시켰다. 또한, 대학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은 대학의 인권 친화적 역할(교육) 및 가치를 중요하게 인식하지만, 학내의 인권침해 관련 사항들(제도, 대응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무관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에 대한 소속감이 강한 학생들은 대학의 인권 친화적 역할과 가치를 더 중시하고, 인권침해 관련 사항들에 더 관심을 가지며, 학교의 인권보호 수준에 대해서도 더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교에서 인권침해 피해를 당한 적 있는 학생들은 이로 인해 인권침해 관련 사항들에 대한 지식은 더 많았지만, 인권보호 수준에 대한 인식은 낮았다. 대학의

* 이 논문은 2020학년도 경기대학교 연구년 수혜로 연구되었음.

** 이 연구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자료(2019-AA-02) 제공으로 이루어졌음.

*** 경기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범죄사회학박사. Lmspu@kyonggi.ac.kr

인권 친화적 역할과 가치를 중시하는 학생들은 학내 인권상황을 양호하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학내의 인권침해 관련 사항들에 대한 지식수준이 높은 학생들은 학교의 인권 보호 수준을 미흡하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외생적 변수들을 통제한 전체모델에서도 잠재 변수들 간의 이러한 관계는 매우 안정적이었으며, 모델의 적합도도 일정 부분 구조모델보다 향상되었다. 추가로, 팬텀변수들을 활용하여 잠재변인 간 개별 경로들의 간접효과 크기 및 유의확률을 분석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연구결과에 기반한 정책적 함의를 논의하였다.

주제어: 대학생, 소속감, 인권침해, 인권의식, 인권상황, 인권보호, 구조방정식

— 목 차 —

- I. 서론
- II. 이론적 논의
- III. 연구방법
- IV. 연구결과
- V. 논의 및 결론

I. 서론

최근 시사저널이 자극적인 제목(“대한민국 대학에서 2일에 1번 성범죄가 발생한다”)으로 연재한 교육부 통계자료 「2022 캠퍼스 성범죄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대학에서 최근 5년간(2018~2022.7) 모두 1,200여 건에 달하는 성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¹⁾ 특히, 2022년 인천 모 대학에서 발생한 ‘준강간치사’ 사건과 같이, 마땅히

1) 성희롱 48%, 성추행 26%, 성폭력 20%, 디지털 성범죄 3%, 스토킹 & 데이트폭력 2% 등(시사저널 2022년 10월 6일 기사).

안전해야 할 교육 현장에서의 성범죄 살해사건은 매우 충격적이어서 세상의 이목을 끄는 것이 당연하지만, 실제로 대학 캠퍼스에서는 그 심각성은 상대적으로 덜하나 훨씬 더 빈발하기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할 다양한 유형의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인권’이란 용어 자체가 갖는 복잡 다의성에 더해 대학이란 조직이 갖는 특수성으로 인해 대학 내 인권침해의 양상은 실로 복잡하고 다양하다. 대학에는 교수, 직원, 학부생, 대학원생 등 다양한 주체가 존재하며, 구성원 간에 다양한 형태의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요컨대, 대학 내 인권침해는 성적인 범주에 한정되지 않고, 물리적 폭력, 언어폭력, 강요, 사생활 침해 등 매우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며, 불평등과 차별행위뿐만 아니라, 심지어 권력관계에 기초한 노동 및 연구 착취와 같은 문제도 포함하는 등 실로 다차원적인 문제이다.

대학 내 폭력과 인권침해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자, 교육 당국 및 주체들의 이 문제에 대한 정책적 개입도 강화되었다. 예컨대, 2010년대 초·중반부터 대학 내 폭력에 대한 개념화가 성희롱·성폭력에서 인권침해로 확장되면서, 기존에 있던 성희롱·성폭력 상담센터 또는 성평등센터도 대학공동체 문화로서의 자유와 평등, 인권의 확립을 위한 인권기구로 확대 개편되어왔다(장다혜 외, 2019). 특히, 2021년에 교육부는 「고등교육법」을 개정하여, 대학 등 모든 고등교육 기관의 교직원, 학생 등 구성원의 인권 보호 및 권익 향상과 성희롱·성폭력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교내에 인권센터의 설치를 의무화하였다.²⁾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이 자리 잡기까지는 제도의 표준화, 전문인력 및 예산의 확보, 교육 및 홍보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으며, 그러한 개입이 과연 대학 환경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의 특성에 부합하는 문제해결의 수단과 절차를 제공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비판적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대학 내 폭력 및 인권침해를 발생시키는 원인적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2) 「고등교육법」 제19조의 3(인권센터) 신설(2021.3.23.).

학내 구성원들의 인권상황에 대한 관심과 인식 등을 살펴보고, 그 대응을 어렵게 하는 대학의 구조와 특성, 정책과 절차, 담당 기구가 갖는 한계점들에 대해 일련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최근(2019)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대학생들의 인권침해 및 인권상황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우선 탐색해 보고자 한다. 특히, 대학과 대학생이라는 한정된 공간 및 지위 상황이 갖는 특성들을 중심으로 가설적 설명모델을 구성함으로써, 학생들의 인권침해 피해와 인권 보호 수준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사실, 국내외에서 특별히 대학생의 학내 인권침해 및 인권상황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체계적·실증적으로 규명하려는 조사 및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게 현실이다. 그나마 기존의 대학생 인권 관련 연구는 대부분 실태조사에 기반한 기술적 연구에 한정된 경향이 강하다. 본 연구는 인권침해 피해 및 인권상황 평가의 원인과 과정에 대한 설명적, 예측적 분석을 시도함으로써 관련 연구의 지평을 넓힐 수 있기를 기대한다.

II. 이론적 논의

1. 인권 및 인권침해의 정의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제10조)과 국제인권조약 등에 근거하여 인권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1호)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인권이 생명권, 자유권, 평등권 및 사회권을 기본 내용으로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1948), 그 구체적인 모습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가변적이라 할 것이므로 그것에 대한 위반, 즉 인권침해를 조작적으로 정의하는 것은 그만큼 어려울 수밖에 없다. 특히, 본 연구가 다루고 있는 대학 내 인권침해는

대학이라는 공간 내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므로, 사회 일반의 개념과는 다소 다를 것이고, 또한 한국 대학만의 고유한 문화적·구조적 특성을 반영할 것이다.³⁾

요컨대, 국내 대학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는 신체적 폭력에 한정되지 않고 성적·언어적 방식의 다양한 양태로 이루어지며, 사제, 선후배, 직원 간 권력 관계에 의한 갑질과 괴롭힘, 노동 및 연구의 착취뿐만 아니라, 성별, 성적 지향, 출신, 장애 등 불평등과 차별행위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더구나 예술·체육계나 의학계 등 특수한 영역의 경우 그 권위적·폐쇄적 성격으로 인해 법이나 제도의 개입이 쉽지 않은 특성도 가지고 있다(고영완 등, 2015:77; 장다혜 외, 2019:76). 따라서 우리나라 대학 내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의 구체적인 양상, 그 복잡성과 다차원성은 국내의 대학 공간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함으로써 파악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본다.

2. 인권침해의 차원과 양태

국내 대학의 인권실태조사는 2010년 이후 주로 대학원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특정 학교에 한정된 것이지만, 학부생을 포함하는 조사로서 최근의 대표적인 두 가지 연구를 소개하면, 먼저, 2018년 서울대학교의 「학생 성폭력·인권침해 실태조사」가 있는데, 이 연구는 인권침해를 성적 피해, 사생활 침해 및 부당한 강요나 협박, 차별피해, 연구·학습·노동의 4가지 큰 영역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그리고 가장 최근(2022)에 경북대학교는 교원과 직원까지 포괄하여 「대학 내 인권침해 피해경험 실태조사 문항 개발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이 연구에서는 앞의 4가지 영역(물론, 세부 항목들은 다름)

3) 장다혜 등은 한국 대학에서의 인권침해 개념화가 해외와 달리 최근에 ‘권력형 성희롱·성폭력’이나 교수 또는 선배의 ‘갑질’과 같은 위계적 권력관계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장다혜 외, 2019:39).

외에 폭력피해(육설·폭언 등 언어적 폭력, 신체적 폭력, 따돌림, 명예 훼손)를 별도의 영역으로 추가하여 조사하였다⁴⁾.

한편, 본 연구가 사용하는 데이터의 기반인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19)의 「대학 내 폭력 및 인권침해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는 전국 단위에서 2~3년제 대학과 학부생을 포괄하는 최초의 종합적인 연구로서 그 가치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인권침해의 양상을 (1) 친밀성과 공동체(사생활 침해, 사적 강요, 폭력·고립행위), (2) 성적 피해(사적 만남 강요, 스토킹, 불법 촬영 및 유포, 술 시중 강요, 성폭력, 언어적 성희롱), (3) 연구 및 학습(학습·연구·실습 등에서의 자율성 침해, 학습·연구·실습 방해 및 접근 권한 배제,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및 도용행위, 노동권 침해, 부당행위 지시) 영역의 세 가지로 대분하였고, 각 하위 영역들도 복수의 항목으로 세분하였다. 요컨대, 우리나라 대학 환경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의 양태는 너무나 복잡·다양하여, 연구마다 다소 다른 차원의 상이한 행위들을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인권의식 및 인권상황 인식

인권의식(Human Rights Consciousness)은 통상 “인권의 담지자인 개인이 인권에 대해 인식하고, 자신과 타인의 인권 가치를 옹호하고 현실에서 이를 실현하려 하는 의지”를 말한다(육주원·신형진, 2020: 216). 문헌에서 인권의식은 인권인식, 인권지각, 인권태도, 인권평가, 인권상황인식, 인권보호인지, 인권감수성 등 매우 다양한 통일되지 않은 용어로 표현되는데, 그것은 아마도 인권의식 역시 매우 추상적이고 다의적이며 다차원적인 개념이기 때문일 것이다.

인권의식을 도덕성과 등치시킬 수는 없지만, 전통적으로 인권의식에 대한 연구는 Piaget(1986-1980)의 인지발달이론을 기초로 하는 도

4) 이 외에, 2021년 인권(성평등)센터의 법제화를 전후로 많은 대학이 학내에서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덕심리학에 많은 빛을 지고 있다(정병은, 2013:112). 그래서 인권연구자들은 Kohlberg(1984)의 ‘도덕추론 6단계 발달론’에 기반하여 사람들의 인권태도 차이를 도덕추론 발달 수준의 차이와 연결하여 파악해왔다. 그러나 이후 Narvaez와 Rest(1995)는 인지발달론적 관점이 ‘사고’(thought)만을 연구해왔던 경향성을 비판하고, 이를 정신분석 영역의 ‘정서’와 행동주의 측면의 ‘행동’과 통합할 것을 주창하고, 도덕적 행동의 네 가지 심리적 과정 - 도덕적 민감성(moral sensitivity), 도덕적 판단(moral judgment), 도덕적 동기(moral motivation), 도덕적 실행(moral implementation) - 을 제시하였다.

국내의 학자들도 이러한 3(4) 구성요소 모형을 토대로 인권의식을 설명하였다. 예컨대, 박상준과 임태승(2010)은 인권의식을 인권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의미하는 ‘인지적 요소’, 인권 친화적 가치와 태도를 의미하는 ‘정의적 요소’, 그리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실천인 ‘행동적 요소’로 나눌 수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국가인권위원회는 2016년 ‘국민인권의식조사’에서 인권의식의 구성체제를 인권인식(인지), 인권(상황)평가, 인권(침해·차별)경험, 인권(현안·정책)지지, 인권(옹호)행동의 5가지 하위 차원으로 정하여 조사 설계하였다. 그리고 일부 학자들은 실제 조사 데이터를 통계 분석하여 인권의식의 차원을 구분하는 작업도 수행하였다. 예컨대, 육주원과 신형진(2020)은 대구 시민을 대상으로 한 ‘인권의식실태조사’ 자료에 기초하여, 인권의식을 구성하는 하위개념으로 인권지식(인권상황에 대한 지식), 인권평가(인권상황에 대한 주관적 평가), 인권경험(인권침해 경험), 인권감수성(차별적인 상황을 ‘문제’로 인지할 수 있는 능력), 인권헌신(비용과 대가를 무릅쓰고라도 인권을 지지하려는 태도), 인권행동(인권증진을 위한 사회적 실천)의 여섯 가지 요소로 세분화하였다.⁵⁾

5) 유사하게, 류지헌과 허창영(2008)은 광역시 소재 C대학 학생들 1945명을 대상으로 자신들이 개발한 20개의 문항을 사용하여 학생들의 전반적인 인권인식을 측정하였으며, 이 자료에 대한 요인분석을 통해 인권인식을 다섯 개의 하위요인(인권교육의 중요성, 인권보호의 인지, 인권침해

한편, 본 연구가 차용한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19)의 조사는 아쉽게도 이러한 인권의식을 체계적으로 측정하지 않았다. 다만, 앞의 논의에서처럼 인권의식을 포괄적으로 정의할 때는 그에 포섭될 수 있는 몇몇 개념들이 있다. 첫째는 대학의 역할과 가치에 관한 다수의 문항이 있는데, 그 중 ‘대학은 학생들의 바람직한 인성을 길러줘야 한다’와 ‘대학은 사회적 가치(평등, 정의 등)와 비판적 사고를 중시해야 한다’라는 두 문항은 합쳐서 ‘대학의 인권 친화적 역할과 가치’ 또는 ‘인권 친화적 교육’을 측정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겠다. 광의의 인권의식 개념에 포섭될 수 있는 두 번째 개념은 ‘인권침해 관련 지식’이다. 이에는 인권침해의 정의, 관련 학교 기구의 지원 절차와 지원 범위, 학생 사치 규범 또는 윤리규정, 관련 학생자치회나 동아리 등에 관한 지식이 포함된다. 세 번째는 학내의 ‘인권상황에 대한 인식’ 또는 ‘인권 보호 수준의 평가’로 명명할 수 있는 것으로, 이는 학과 및 학교에서 자신의 인권이 어느 정도 보호되고 있는지 스스로 평가하게 하는 문항들이다. 다만, 인권의식의 구성요소에 대한 앞의 논의에서는 정신적 인권침해로 인한 ‘불편한 감정’ 등을 고려하여 ‘인권침해 경험’도 인권의식을 구성하는 한 요소로 간주하고 있으나, 그것이 물리적, 신체적 피해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인권침해 피해는 인권의식과는 구분되는 개념으로 다루려고 한다.

4. 대학생들의 인권침해 및 인권상황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학 내 인권침해에 관해 국내외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은 다양한 인권침해의 발생 실태에 대한 조사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고, 인권침해의 발생을 예측해주는 이론적 모델과 그에 기반한 개념적 변수들을 담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러한 한계는 인권의식 및 인권상황 인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일부 연구들은 단순한 인권침해 및 인권의식의 실태조사에서 나아가 그것에 잠재적으로 영향

해의 지각, 참여활동, 전공연계성 인지)으로 분류하였다.

을 미칠 수 있는 대학 특징적인 요인들에 대한 정보도 함께 조사하였다. 국내에서는 2019년에 수행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조사가 대표적이다. 물론, 이 연구도 인권침해나 인권상황 평가를 예측해줄 수 있는 이론적 모델에 기반한 개념적 변수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는 그러한 잠재력을 가진 개념과 변수들을 일부 찾을 수 있다.

한편, 대학에서 빈발하는 성희롱, 성추행 등 성적 피해와 물리적 구타, 협박 등 일부 심각한 인권침해는 상당 부분 범죄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범죄피해를 설명·예측하는 기존의 이론(피해축발이론, 생활양식이론, 일상활동이론, 구조적 선택이론 등)과 핵심 개념들을 적용해 볼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본다. 그러나 아쉽게도 본 연구는 이차적 자료(secondary data)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존의 이론적 모델로써 인권침해 및 인권상황 인식을 설명·예측할 수는 없고, 현 데이터에 포함된 변수들만으로 연구모델을 구성할 수 밖에 없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데이터가 담고 있는 변수들에 한정하여 그것들이 대학생의 인권침해 피해와 인권상황 평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 논의해 보았다.

대학 생활의 어려움 학생들의 인권침해 피해 및 인권상황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서 우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학교생활의 어려움’과 이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학교생활에 대한 (불)만족도’가 있을 것이다. 학교생활에 어려움이 많은 학생은 학교생활 만족도가 낮을 것이고, 반대의 상황에 있는 학생들은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의당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가장 많이 호소하는 어려움은 무엇일까? 본연의 학업·연구의 어려움과 학과·전공의 부적합성 등은 차치하고, 학생들은 부모의 지원 부족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경우, 학업의 지속이 어려워지며 아르바이트 등 경제활동에 내몰리고 이로 인해 학업은 더욱 어려워지고, 선·후배, 동기들과의 교류 부족에 의해 관계도

소원해질 수 있으며, 교수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지며, 특히 대학원생의 경우 지도교수와의 관계도 어려워질 수 있다. 경제적 어려움은 부모가 사망한 경우나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는 극도로 심화될 수 있다. 소수이지만 기혼 학생의 경우 육아 및 가족 돌봄이나 가족 갈등의 문제를 겪을 수도 있다. 취업 및 진로에 대한 고민은 모든 학생이 공통적으로 갖는 것이지만, 일부 학생들은 자신들과는 무관하게 학과·전공의 통폐합, 구조조정 등으로 대학 행정 당국이나 외부의 힘에 의한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있다. 대학 생활에 있어서의 이 모든 어려움은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감을 떨어뜨리고, 나아가 학교에 대한 소속감 또는 대학 구성원들과의 유대감을 약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문헌에서 대학 생활의 어려움이 인권침해 피해나 인권상황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 다룬 연구는 보이지 않으나, 그것의 직접적 결과로 볼 수 있는 학교생활 만족도의 인권의식에 대한 효과를 다룬 경우는 몇몇 있다. 예컨대, 이정연 외(2020)는 2019년 경기도 초중고학생 인권실태조사의 자료를 사용하여, 학교생활 만족도의 인권의식에 대한 정적 효과를 발견하였다.⁶⁾ 또한, 정은아·백진아(2023)는 2018년 한국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의 중소도시 중학생 자료를 사용하여, 학교생활에 충실하고 만족하는 경우 사회적 공정과 인권에 대한 의식(인권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정도)도 높아지는 것을 발견하였다.⁷⁾

6) 학교생활 만족도는 ‘학교 친구들은 나를 존중하고 배려한다’ 외 Likert 4 문항으로, 인권의식은 ‘학생은 사회문제나 정치문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필요가 있다’ 포함 5문항으로 측정함.

7) 이동욱(2023)은 동일한 조사의 2020년도 고등학생 자료를 분석하여 학교생활 만족도와 인권의식 수준 간 유의한 정적 관계를 확인하였다. 다만, 위 정은아·백진아(2023)와 이동욱(2023)은 학교생활 만족도에 대해서 서로 다른 문항들을 사용하였다. 전자는 학교의 바람직한 기능에 대한 동의 정도를 측정하는 4문항을 사용하였지만, 후자는 학교 친구 간의 존중, 교사의 존중 태도, 수업 시간의 흥미, 학교 즐거움의 4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이 차이는 아마도 한국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의 조사표 변경

학교 소속감 또는 유대감 학생들은 자신을 대학의 한 구성원이라 인식하고 있을까? 구체적으로, 학교가 자신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도와준다고 느끼고 있는지, 학교의 당당한 구성원이라는 느낌을 받는지, 학교에서 발생하는 일을 소재로 가족 간, 학우 간 이야기를 나누는지, 학교 구성원들이 서로에게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주고받는지, 자신이 학교에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 유대감을 느끼는지 등의 문제는 인권침해 피해는 물론이고, 그러한 상황 발생 시 대응방식과 학교의 인권상황에 대한 인식과 개선을 위한 참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 할 것이다. 예컨대, 하경희·강병철(2009)은 경기도 내 4개 대학에 재학 중인 사회복지학 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사회적 지지(학우 등 주변의 타인으로부터 받는 지지에 대한 인지 정도)가 인권태도(인권을 일관되게 지지하는 정도)에 유의미한 정적 효과를 갖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학생회, 자원봉사 등 학생들의 교내외 참여활동 정도도 인권태도를 향상시켰는데, 이러한 참여활동은 학교 소속감이나 학생들 간 유대감을 높이는 요소로 볼 수 있을 것이다.⁸⁾

인권침해 피해 인권침해 피해경험이 인권상황 인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리라고 가정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다. 여러 인지이론가들(Downey *et al.*, 1998; Rosen *et al.*, 2007)이 청소년기 또래로부터의 폭력피해(부모의 학대 포함)가 부정적인 인지적 스키마를 형성하게 하여, 외부의 상황과 자극에 대한 정확하고 균형 잡힌 인지(평가)를 어렵게 한다고 하였다. Gibb(2002)은 만성적인 폭력과 학대에 노출된 청소년들은 주변 환경에 대해 부정적 귀인 오류를 갖

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 8) 유사하게, 유성렬·김신영(2013)은 2013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的高등학생 자료를 분석하여, 청소년들의 사회문제 참여경험(사회문제에 대해 친구들과 토론하기 위해 모임이나 카페에 가입하는지, 거리집회나 문화행사에 참여하는지)이 인권상황에 대한 태도(인권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정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하였다.

게 되어, 타인들의 반응과 행동을 적대적이고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하기 쉽다고 하였다. 실제로 국내에서 행해진 많은 연구가 청소년기 인권침해 피해와 인권의식 또는 인권상황 인식 간의 관계를 다루었고, 이와 유사한 결론을 얻었다. 대부분의 연구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반복횡단 조사인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하였는데, 다수(김영미, 2016; 양영미·김진석, 2023)가 청소년들의 폭력이나 차별피해, 성적 피해, 교사로부터의 학대피해 경험이 자기 인권평가(학교 등에서 자신의 인권이 존중받는 정도)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만, 그러한 피해 경험이 인권상황에 대한 태도(인권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정도)에 미치는 효과는 일관되지 않았다.⁹⁾

대학의 역할·가치에 대한 인식과 인권침해 관련 지식 비록, 최고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의 역할과 가치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할 수는 있겠지만, 대학이 학생들에게 바람직한 인성을 갖도록, 그리고 평등과 정의 등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고 비판적 사고를 갖도록 교육해야 한다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대학의 인권친화적 역할(교육)과 가치를 중시하는 학생이라면, 학내 인권상황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요즘은 대학마다 성희롱·성폭력 상담센터 또는 인권·성평등센터가 설치되어 있고 인권 관련 법정 교육(‘폭력예방교육’ 등)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다¹⁰⁾. 그래서 학생들은 인권침해의 종류와 정의, 인권침해를 목격하

9) 예컨대, 유성렬·김신영(2013)은 2013년차 조사의 고등학생 자료를 사용하여, 청소년들의 체벌 및 차별피해 경험이 인권상황에 대한 태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하였으나, 정은아·백진아(2023)는 2018년차 조사의 초중고학생을 분석하여, 차별피해경험이 인권의식 수준(인권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정도)을 높이는 것을 발견하였다.

10)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매매 예방교육),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거나 자신이 경험하게 되었을 때의 대응방식, 학내 구제 제도와 기구 등에 대해 과거보다는 더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이러한 인권침해 관련 지식도 학생들의 학내 인권상황에 대한 평가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예컨대, 경기도 내 사회복지학 전공 대학생들을 조사한 하경희·강병철(2009)은 인권교육경험이 인권 태도(인권을 일관되게 지지하는 정도)에 대해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하였고, 김영미(2016)는 2014년도 아동·청소년인권 실태조사의 중학생 자료를 사용하여 인권교육이 자기 인권평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¹¹⁾ 한편, ‘대학의 역할·가치에 대한 인식’과 ‘인권침해 관련 지식’은 인권의식의 다차원성에 관한 앞의 논의에 따르면,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인권상황에 대한 평가’ (자기 인권의 보호수준에 대한 평가)와 함께 모두 ‘인권의식’을 구성하는 요소들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이들은 엄밀히 말하면 서로 명확히 구분되는 개념들이기도 하며, 따라서 이들 간에 일정한 논리적 인과관계를 설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연구모델에서 다시 논의함).

이상에서 언급된 요인들 외에, 통제변수로서, 학생들이 소속돼 있는 과(전공)의 성격과 학교의 구조적·제도적 특성들(사립/공립, 4년제/2-3년제, 수도권/비수도권)도 인권침해 피해 및 인권상황 평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전공(예체능·치의학 계열) “대학생과 같은 준전문가 집단의 인권 태도는 도덕성 발달이라는 일반적인 준거로 해석하기보다는 직업적 가치와 관련하여 전공영역별 차이에 대한 고려가 더 중요할 수 있다”(류지현·허창영, 2008:185). 따라서 전공이나 학과의 구조적, 문화적 특성이 인권침해의 발생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대학 내 폭력 및 인권침해의 실태를 조사한 연구들은 초기

실시) 등.

11) 최근 1년 동안 학교에서 인권교육을 받은 횟수가 많을수록 청소년들은 자신의 인권이 더 존중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는 체육계나 의학계와 같이 특수한 전공영역에서의 폭력 및 인권 침해에 집중하였다. 이들 연구는 해당 분야의 조직문화가 가지는 권위적이고 위계적인 성격에 대한 문제 제기로 연결되었다. 예컨대, 2010년에 수도권 대학의 학생선수 643명을 대상으로 물리적·신체적 폭력과 언어적·정서적 폭력¹²⁾의 피해 경험을 조사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연구(류태호 외, 2010)에서는 연구대상자 전체의 89.7%(남학생 89.2%, 여학생 91.9%)가 기합, 체벌, 욕설, 과도한 훈련 등 한 가지 이상의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체육계열의 높은 폭력 발생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은 폭력의 수용도를 높이는 집단문화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폭력피해 경험자의 대부분(69.8%)은 그러한 폭력을 “훈련 태도가 나빠서 규율을 잡기 위한 것”으로 수용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류태호 외, 2010:103). 그래서 고영완 등(2015:77)은 대학 내 운동부에서는 폭력이 권위주의적 구조와 집단주의 문화 속에서 순응될 뿐만 아니라 재생산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2018년 초 문화예술계를 중심으로 급속히 퍼져나간 미투운동은 학원가도 예외가 아니어서, 교내 성폭력을 고발하는 소위 ‘스쿨미투’로 확대되었다. 실제로, 문화예술계 대학생의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를 다룬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미정 외, 2019)의 조사에서는 대학의 문화예술 계열에 위계적·폐쇄적·성차별적인 집단문화가 형성되어 있으며, 심사평가의 주관성 때문에 교수와 강사의 권력이 크게 작용하여 피해자의 적극적 대응을 방해함을 확인하였다.

유사한 맥락에서, 의과대학의 권위적인 조직문화와 위계질서가 교수-학생 관계뿐만 아니라 선후배 관계에서 각종 강요, 차별, 폭력, 성

12) 스포츠 분야의 폭력은 스포츠와 관련된 시간적·공간적·관계적 영역을 포함하고 물리적인 힘으로 상해, 폭행, 감금, 약취 및 유인 등의 행위로 신체적 피해를 야기시키는 행위, 명예훼손 및 모욕, 공갈, 협박, 강요 및 따돌림 등의 자존감을 파괴하는 언어 및 정서적인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등을 담고 있다(류태호 외, 2010:87).

희롱 발생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으며, 나아가 조직의 폐쇄성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문제 제기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실제로, 2017년 부산대학교병원의 전공의 폭행 사건¹³⁾이 공론화되자, 2018년에 사단법인 인권의학연구소(IMHR)와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동으로 의과대학 학생들이 교육 현장과 병원 실습 과정에서 경험하는 부당한 대우 및 인권침해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였는바, 조사결과 전국 40개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생 1,762명 중 매우 많은 수가 교육과정에서 모임 참석에 대한 강요(59.5%), 언어적 폭력(49.5%), 음주 강요(46.2%), 기타 강요(49.7%), 학업적으로 부당한 대우(26%), 기합과 물리적 폭력(22.8%)을 경험하였고, 성희롱은 여학생 중 37.4%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이화영 외, 2018).

학교의 구조적·제도적 특성들 최근 국내 대학은 학령인구의 급감과 중도이탈 학생의 증가 등으로 재정난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러한 재정난은 지방대일수록 더 심각할 개연성이 있다. 심화된 재정난은 대학의 인적, 제도적, 물적 조건의 악화를 가속화 한다. 인적, 제도적 조건의 악화는 대학 내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인력의 부족, 교육 프로그램 및 캠페인의 약화와 인권침해 구제의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고, 열악한 물적 조건은 대학의 교육 및 물리적 환경의 황폐화와 CCTV, 조명, 접근통제장치, 자연적 감시력 등 범죄예방 잠재력의 약화를 초래하여, 범죄학적 시각(일상활동이론)에서 보면 소위, ‘가용한 보호력의 부재’(no capable guardianship) 상황을 조성할 수 있다(Cohen and Felson, 1979). 고등교육법의 개정으로 의무 설치된 인권센터조차도 전문인력과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유명무실해지기 십상이다. 요컨대, 수도권대학이든 지방대학이든, 공립이든 사립이든, 4년제든 전문대든 간에 대학의 재정난은 장학제도의 약화(또는 소멸), 교육 및 생활환경의 악화 등으로 인해 학생들의 대학 생활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학교 소속감을 약화시키며, 인권침해 피해를 증

13) 부산대학교병원 전공의들이 지도교수 A씨로부터 2015년부터 무려 2년간 온몸에 피멍이 들 정도로 폭행을 당해온 사건.

가시키고, 학내 인권상황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데이터에 조사대상 대학의 재정상태를 다른 변수가 없는 것은 (당연하지만) 아쉬운 점이라 하겠다.

인구학적 특성 본 연구에서는 인구학적 통제변수로서 성별과 연령이 포함된다. 문헌에서 성별과 연령의 인권침해 피해 및 인권상황 평가에 미치는 영향은 일관되지 않고 다소 혼란스럽다. 우선, 성별에 따른 인권침해 피해의 정도는 인권침해의 유형에 따라 다른 것 같다. 명백히 성적 피해는 여학생이 많이 경험하지만, 기타 폭력피해, 강요 등은 성적 경향성을 발견하기 어렵다. 정향미(2004)는 부산시 소재 5개 대학의 남녀 재학생 380명을 조사한 자료에서 성희롱 피해 경험은 여학생 중에서 그리고 가해 경험은 남학생 중에서 월등히 많은 것을 확인하였다.¹⁴⁾ 반면, 인권의식(류지현·허창영, 2008), 인권감수성(심태은·이송이, 2018), 인권상황에 대한 태도(유성렬·김신영, 2013; 양영미·김진석, 2023)¹⁵⁾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다. 한편, 연령(초/중/고 학제나 학년)은 학생들 대상의 연구에서는 아마도 유효한 독립변수가 되기 위해 가져야 할 충분한 변량을 확보하기 어려운 이유로, 그 효과가 대개 미미하거나 일관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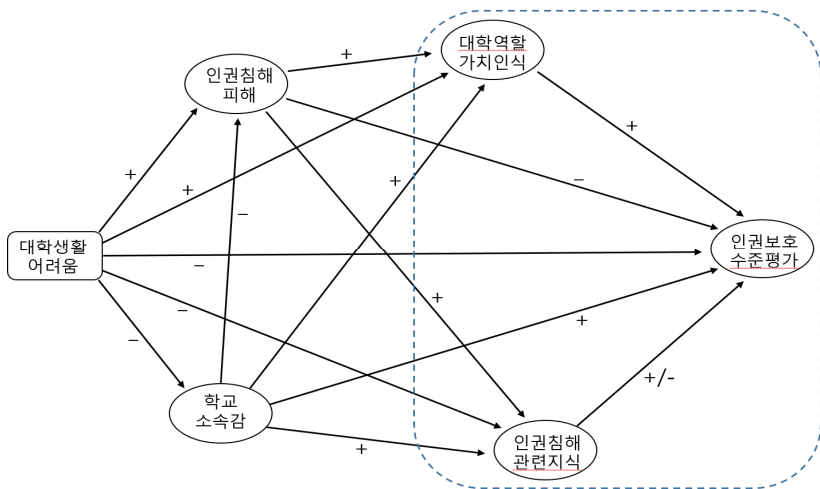
5. 연구모델

<그림 1>은 앞의 논의를 바탕으로 구성한 본 연구의 연구모델을 보여준다. 이것은 대학 내 인권침해와 인권상황 인식(자기 인권 보호 수준의 평가)을 설명·예측해주는 잠재변수들 간의 가설적 인과관계를 보여주는 경로모델이다.¹⁶⁾ 이 모델은 첫째, 대학 생활의 어려움은

14) 또한 정은아(2022)는 2018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의 중소도시 중학생 표본 695명을 대상으로 차별피해 경험과 인권의식을 분석하였는데,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차별피해 경험을 보고하였다.

15) 자신의 인권이 존중받는 정도에 대한 평가

학교에 대한 소속감과 인권침해 피해, 대학의 역할·가치에 대한 인식, 인권침해 관련 지식을 경유하거나 직접적으로 인권 보호 수준 평가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 둘째, 학교 소속감은 인권침해 피해, 대학 역할·가치 인식, 인권침해 관련 지식을 경유하거나 직접적으로 인권 보호 수준 평가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 셋째, 인권침해 피해는 대학 역할·가치 인식이나 인권침해 관련 지식을 경유하거나 직접적으로 인권 보호 수준 평가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 넷째, 대학 역할·가치 인식은 인권 보호 수준 평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다섯째, 인권 침해 관련 지식은 인권 보호 수준 평가에 정적 혹은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일련의 가설적 관계들을 보여준다.



<그림 1> 연구모델

그런데, 대학 역할·가치 인식(인권 친화적 교육), 인권침해 관련 지

16) 다만, 실제 분석에서 ‘대학생활어려움’은 학생들이 겪을 수 있는 8가지 항목의 어려움에 대해 ‘예/아니오’의 두 가지 범주로 답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중복 선택 가능) 단일 측정 변수로 처리하였다.

식, 인권 보호 수준 평가는 앞의 논의에 의하면 모두 광의의 인권의식을 구성하는 하위요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개념을 측정하기 위한 설문 문항들의 내용과 형식을 분석해 보면, 이들이 상호 관련되기는 하지만 명백히 구분되는 개념이며 또한, 이들 간에는 일정한 논리적 인과관계가 설정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그것들을 별개의 잠재변수들로 다룬다. 다만, 예비분석 결과, 대학 역할·가치 인식과 인권침해 관련 지식 사이에는 논리적으로 인과적 우선성이 불명확하고 유의미한 인과관계도 존재하지 않았기에 경로를 설정하지 않았다.

III. 연구방법

1. 데이터

본 연구가 사용한 자료는 2019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수행한 “대학 내 폭력 및 인권침해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통해 수집된 설문조사 자료이다. 이 조사는 학생들이 대학에서 경험하는 인권침해의 실태와 양상은 물론 피해 이후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제약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에서 실시되었다. 상기 연구는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모두 포함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분석 목적상 학부생 대상의 조사자료만을 활용하였다. 모집단 및 표본추출과정을 보면, 교육부의 2018년 고등교육기관(대학생) 통계를 기반으로 성별, 지역, 대학 형태(전문대학 또는 4년제)를 기준으로 표출하였으며, 목표 표본은 대학생의 경우 1,500명이었다. 또한, 인권침해 양상 및 대응 과정에 차이를 가져오는 주요한 요인으로서 전공계열과 학교 유형은 모집단 정보가 없어 조사과정에서는 이를 골고루 포함하기 위해 비비례(disproportionate) 층화표집을 했다. 이처럼, 전국 단위에서 대학생 인권 조사가 이뤄진 것은 본 연구가 처음이라 할 수 있다. 설문조사는 웹조사를 중심으로 2019년 9월

20일부터 3주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치·의학계의 경우 대인 면접 조사를 병행하였다. 분석에 포함된 총응답자는 대학생 1,265명이다.

2. 변인과 측정

본 연구의 연구모델에는 종속변수(인권 보호 수준 평가)를 포함하여 모두 6개의 잠재변수가 있다: ‘인권침해관련지식,’ ‘대학역할가치 인식,’ ‘인권침해피해,’ ‘학교소속감,’ ‘대학생활어려움.’

인권보호수준평가 - 대학생들은 평소 학교생활에서 학교의 환경이 잘 정비되어 있고 안전하다거나, 구성원들이 좀 거칠고 무질서하다거나 또는 학생들의 인권이 대체로 잘 보호받고 있다거나 하는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인권 보호 수준의 평가는 “귀하의 학과 및 학교의 인권보장 수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은 어디에 가깝습니까?”라는 질문으로 측정하였다. 학교와 학과 각각에 대한 응답범주는 ‘1=전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2=보장받지 못하는 편이다, 3=보장받는 편이다, 4=매우 잘 보장받고 있다’이다. 두 문항의 신뢰도는 Chronbach’s $\alpha = .871$ 로 높게 나타났다.

인권침해관련지식 - 인권침해 관련 지식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4가지 사항들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물어 측정하였다: 1) 인권침해를 경험하거나 목격했을 때 학교 기구의 지원 절차와 지원 범위, 2) 인권침해를 목격했을 때 제3자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 3) 인권 관련 학생 자치규범 혹은 윤리 규정, 4) 인권침해 발생 시 도움을 줄 수 있는 학생자치회 혹은 동아리 등. 각 문항에 대한 응답범주는 ‘1=전혀 모름, 2=잘 알지 못함, 3=아는 편, 4=잘 안다’이다. 요인분석 결과, 4가지 문항은 하나의 요인으로 묶였으며, 신뢰도는 Chronbach’s $\alpha = .861$ 로 높게 나타났다.

대학역할가치인식 - 대학의 (인권 친화적) 역할과 가치에 대한 인식은 다음 두 문항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는지를 물어 측정하였다: 1) 대학은 학생들의 바람직한 인성을 길러줘야 한다, 2) 대학은 사회적

가치(평등, 정의 등)와 비판적 사고를 중시해야 한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범주는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은 편이다, 3=그런 편이다, 4=매우 그렇다’이다. 두 문항의 신뢰도는 Chronbach’s $\alpha = .567$ 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인권침해피해 - 인권침해 피해는 다섯 가지 대분류(‘사생활 침해,’ ‘사적 강요,’ ‘폭력 및 고립,’ ‘성적 피해,’ ‘연구 및 학습’) 하에 43가지의 매우 다양하고 포괄적인 침해 항목들을 망라하여 조사하였다.¹⁷⁾ 침해피해 여부에 대한 질문은 “귀하는 현재의 학부에 입학하거나 입학이 확정된 이후 학교생활을 하면서 교수, 선·후배,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직접 경험한 경우에 한해 모두 체크해 주십시오”이다. 각각의 문항에 대한 응답범주는 ‘예/아니오’의 두 가지이다. 본 연구에서는 각 하위 영역별로 침해를 경험한 항목을 합한 점수를 사용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이 5가지 피해 유형은 하나의 요인으로 묶였으며, 신뢰도는 Chronbach’s $\alpha = .780$ 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교소속감 - 이 변수는 학생들의 정체성의 한 가지 양상으로 측정되었다. 그것은 5가지 질문에 대한 응답자의 동의 정도로 측정하였다: 1) 이 학교는 내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나를 도와준다, 2) 나는 이 학교의 구성원이라는 느낌을 받는다, 3) 나는 이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이야기한다, 4) 이 학교의 사람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5) 나는 이 학교에서 다른 사람들과 좋은 유대감을 가지고 있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범주는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은 편이다, 3=그런 편이다, 4=매우 그렇다’이다. 요인분석 결과, 이 5가지 문항은 하나의 요인으로 묶였으며, 신뢰도는 Chronbach’s $\alpha = .803$ 으로 높게 나타났다.

17) 사생활 침해, 사적 강요, 폭력 및 고립은 그보다 상위의 ‘친밀성과 공동체’ 영역을 구성하는 하위 영역들이다. ‘성적 피해’와 ‘연구 및 학습’ 영역도 그 아래 다양한 하위 영역이 존재한다. 그러나 그 실제 피해사태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이 둘은 상위 영역으로 묶은 것이다.

대학생활어려움 - 학생들이 대학 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8가지 항목의 어려움 - 1) 학업/연구수행의 어려움, 2) 경제적 어려움, 3) 학업/연구 이외의 생활문제(육아 및 가족 돌봄, 가족 갈등 등), 4) 교수 및 지도교수와의 관계, 5) 선·후배, 동기들과의 관계, 6) 취업 및 진로 고민, 7) 학과/전공 통폐합 등 구조조정, 8) 학과/전공의 부적합성 및 교과목의 전문성 부족 - 에 대해 해당되는 것을 중복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각 항목에 대한 응답범주는 ‘예/아니오’의 두 가지 인 셈이다.

다음으로, **통제변수**는 일련의 예비분석을 통해 잠재변수에 대해 유효한 영향력을 보였던 6가지(인구학적 변수 2개와 학교 특성 변수 4개) 변수들로 한정하였다. 먼저, 성별은 여성을 1로 더미 코딩하였고, 학년은 본 데이터가 학부 2-3년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더 많은 변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연령으로 대체하였다. 전공계열은 예비분석에서 예체능계열과 치의학계열의 인권침해 수준이 다른 전공(인문·사회계열, 자연·이공계열) 대비 더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 둘을 묶은 예체능·치의학계열을 1로 더미 코딩하였다. 나머지 사립대학, 사년제대학, 수도권대학 역시 1로 더미 코딩된 모조변수들이다.

3. 분석방법

분석방법은 기술통계, 상관관계, 신뢰도 및 탐색적 요인분석, 회귀분석 등 예비적 분석은 SPSS로, 그리고 확인적 요인분석, 경로분석 등은 AMOS 구조방정식모델링을 활용하였다. 구조방정식은 먼저 잠재변수만을 갖는 구조모델을 다룬 후, 통제변수들을 포함한 전체모델로 확장해 나갔으며, 마지막으로, 구조모델에서 매개변수들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팬텀변수를 활용하여 개별 경로의 간접효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IV.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표 1> 응답자의 특성(N=1,265)

구분		응답자수(%)	구분		응답자수(%)
성별	남학생	493(39.0)	대학형태	4년제	1,007(79.6)
	여학생	772(61.0)		2-3년제	258(20.4)
학년	1학년	254(20.1)	지역	수도권	557(44.0)
	2학년	383(30.3)		비수도권	708(56.0)
	3학년	293(23.2)	전공계열	인문사회계열	565(44.7)
	4학년	335(26.5)		자연 및 이공계열	418(33.0)
학교유형	국/공립	392(31.0)		예·체능계열	174(13.8)
	사립	873(69.0)	치·의학계열	108(8.5)	

<표 1>은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보여준다. 전체 응답자의 61%(772명)가 여학생으로, 남학생보다 약 1.5배 많이 조사되었다. 학년은 2학년이 다소 많지만 대체로 고르게 분포되었다. 학교 유형은 사립이 전체의 약 2/3(69%)이다. 대학 형태는 4년제가 79.6%로서, 교육부 고등교육기관 통계(75.5%) 대비 약간 많이 표집된 셈이다. 지역은 수도권이 44%로서, 이 역시 고등교육기관 통계 대비 4%정도 많이 조사된 것이다. 전공계열은 인문사회계열이 44.7%로 가장 많고, 예·체능계열과 치·의학계열은 합쳐서 22.3%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는 최종 분석에 사용된 잠재변수들과 외생적 통제변수들 간의 상관관계와 주요 기술통계를 보여준다. 먼저, 6가지 내생변수 간의 이변량 상관분석 결과를 보면, ‘인권침해피해’와 ‘대학역할가치인식’ 간 관계와 ‘학교소속감’과 ‘인권침해피해’ 간 관계를 제외한 모든 관계가 유의미하다. 6가지 외생변수들은 잠재변수들과 부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다중공선성이 의심되는 부분은 전혀 없다.

<표 2> 변인들의 상관관계 및 기술통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인권보호수준평가	1											
2. 인권침해관련지식	.079**	1										
3. 대학역할가치인식	.217**	.113**	1									
4. 인권침해피해	-.214**	.113**	.012	1								
5. 학교소속감	.453**	.300**	.281**	-.011	1							
6. 대학생활어려움	-.107**	-.096**	.085**	-.148**	.234**	1						
7. 성별_여성	-.040	-.062*	.109**	.028	.032	.090**	1					
8. 연령	-.041	-.009	-.024	-.081**	.166**	.033	-.320**	1				
9. 예체능치의계열	-.069*	.037	-.024	.014	.047	-.023	.085**	-.173**	1			
10. 사립대학	-.036	.023	.092**	.033	-.031	-.009	.085**	-.041	.104**	1		
11. 사년제대학	.020	-.081**	.062*	.005	.067*	.056*	-.022	.284**	-.285**	-.148**	1	
12. 수도권대학	.014	.063*	.025	.048	-.038	.002	.004	.117**	-.092**	.174**	-.025	1
최소값	2	4	2	0	5	0	0	18	0	0	0	0
최대값	8	16	8	32	20	8	1	32	1	1	1	1
평균	6.089	9.338	6.300	1.689	13.844	2.038	.610	21.780	.220	.690	.800	.440
표준편차	1.067	2.626	1.082	2.755	2.609	1.189	.488	2.364	.416	.463	.403	.497

* P < .05 ** P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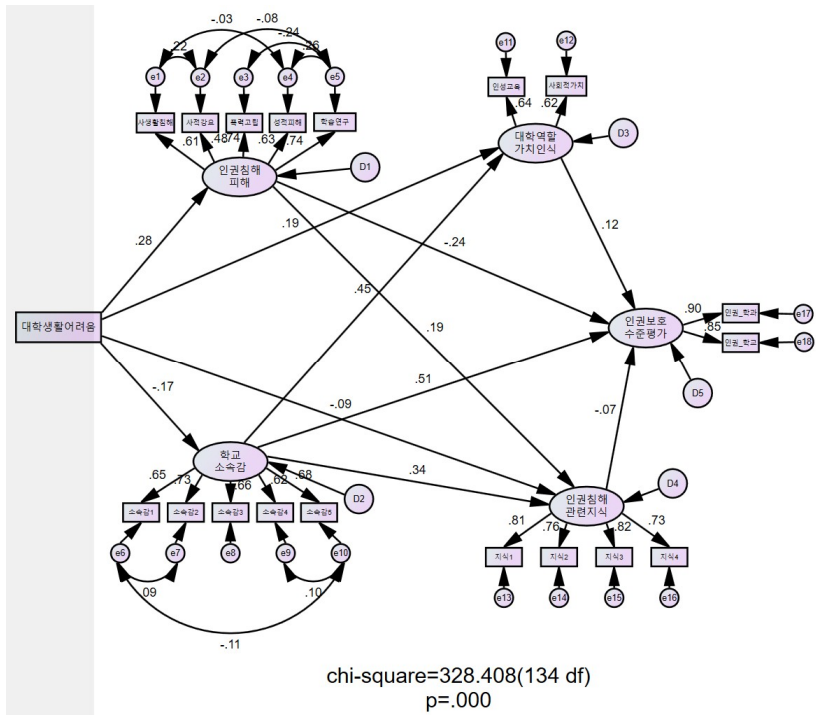
다음으로, 기술통계를 보면, 종속변수인 ‘인권보호수준평가’의 최대값은 8이고 평균은 6.089이다. ‘인권침해피해’의 최대값은 32이지만,¹⁸⁾ 피해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 전체평균은 1.689에 불과하다. 피해 경험이 있는 학생은 50.0%(633명)이고, 조사된 전체 피해 건수는 2,136건이며, 모두 32가지 항목에서 피해가 집계되었다. 따라서 개별 피해자당 평균적으로 3.37항목에서 피해를 경험한 셈으로 보면 된다. ‘대학생활어려움’의 평균은 2.038인데, 이는 연구대상 학생당 약 2가지의 곤란을 토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학생들의 만연령은 18세에서 32세 사이이고, 평균은 22세이다.

2. 구조모델 분석결과

<그림 2>와 <표 3>은 내생적 변인 간 관계, 즉 구조모델의 분석결과(유의미한 경로만)를 보여준다. 본 연구가 설정한 연구모델과 달리, ‘대학생활어려움 -> 인권보호수준평가,’ ‘학교소속감 -> 인권침해피해,’ ‘인권침해피해 -> 대학역할가치인식’ 경로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요컨대, ‘대학생활어려움’의 ‘인권보호수준평가’에 대한 직접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고 그 효과의 대부분은 매개변수들을 통한 간접 효과일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개별 경로들의 효과를 보면, (1) 학생들이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갖는 다양한 어려움은 그들의 학교소속감을 낮추고, 인권침해 피해를 증가시키며, 대학의 인권 친화적 역할과 가치를 중시하게 하지만, 인권침해 관련 정보(지식)에 대한 관심은 약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결과는 흥미롭지만, 일견 모순되어 보이기도 한다. 다만, 현재로서는, 학교생활 중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타인의 어려움이나 인권침해 관련 사항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에는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2) 학교에 대한 소속감

18) 이 수치는 1건이며, 극단치로서 응답의 신뢰성에 의심이 가는 사례이나, 대체에는 영향이 없다.



<그림 2> 구조모델 분석결과(유의미한 경로만, ML 표준화 계수)

<표 3> 구조방정식(구조모델) 분석결과

경로	B	S.E.	C.R.	P	β
학교소속감 ← 대학생생활어려움	-.072	.013	-5.417	***	-.170
인권침해피해 ← 대학생생활어려움	.102	.013	8.155	***	.276
대학역할가치인식 ← 대학생생활어려움	.066	.013	5.028	***	.190
대학역할가치인식 ← 학교소속감	.369	.041	8.973	***	.445
인권침해관련지식 ← 학교소속감	.412	.043	9.586	***	.344
인권침해관련지식 ← 인권침해피해	.260	.047	5.517	***	.190
인권침해관련지식 ← 대학생생활어려움	-.046	.015	-2.995	**	-.092
인권보호수준평가 ← 인권침해피해	-.282	.037	-7.654	***	-.239
인권보호수준평가 ← 대학역할가치인식	.144	.051	2.852	**	.116

인권보호수준평가 ← 인권침해관련지식	-.063	.027	-2.335	*	-.073
인권보호수준평가 ← 학교소속감	.532	.044	12.096	***	.5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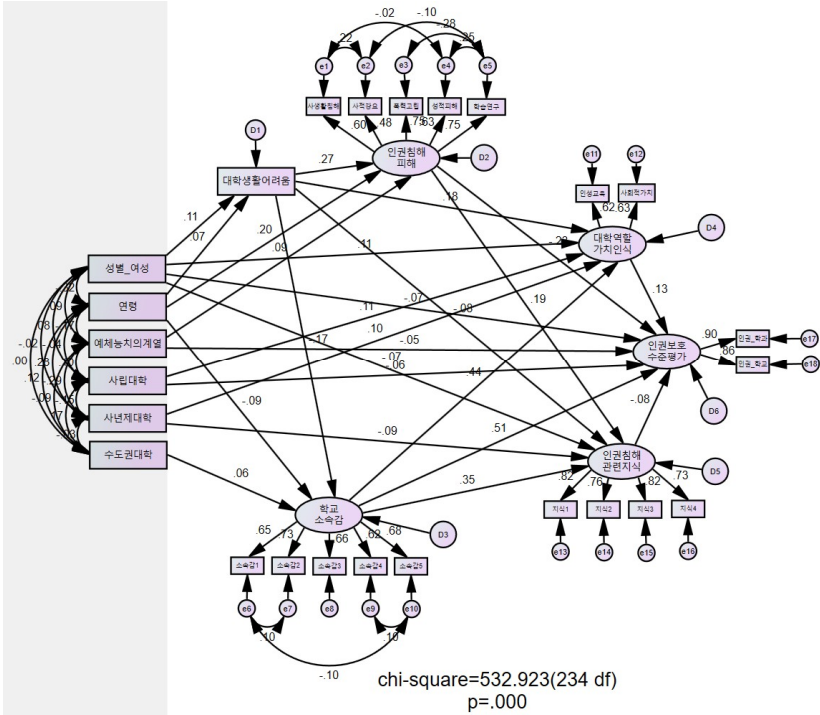
※ 모델적합도: CMIN/DF = 2.451, NFI = .960, CFI = .976, RMSEA = .034

* P < .05 ** P < .01 *** P < .001

내지 구성원 간 유대감은 학생들이 대학의 인권 친화적 교육 기능을 중시하게 하고, 그들의 인권침해 관련 지식수준을 높이며, 자기 인권이 학과 및 학교에서 보장받는 정도를 높게 평가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 (3) 인권침해 피해 경험이 많을수록 인권침해와 관련한 대응방식, 학내 구제 제도와 기구 등에 대한 지식수준은 높고, 자기 인권 보호 수준에 대한 평가는 낮은 경향이 있다. (4) 대학의 인권 친화적 교육 기능을 중시하는 학생은 자기 인권의 보호 수준을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5) 학내의 인권침해 관련 대응방식, 구제 제도와 기구 등에 대한 지식수준이 높은 학생은 자기 인권 보호 수준을 미흡하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 마지막 경로(‘인권침해관련지식 -> 인권보호수준평가’)의 효과는 좀 논쟁적일 수 있다. 그것은 인권침해와 관련한 지식의 수준이 높은 학생들은 실제 교내에서 인권침해 피해를 경험해 본 학생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신의 사건이 처리된 방식에 따라서 학교의 인권 보호 수준을 높게 평가할 수도 낮게 평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앞의 상관관계 분석에서 두 변수 간 상관계수가 약하긴 해도 정적이었는데, 이 구조모델 분석에서는 약하지만 부적으로 변화했다는 사실은 후속연구를 통해 ‘인권침해피해’, ‘인권침해관련 지식’, ‘인권보호수준평가’ 삼자 간 관계(상호작용 효과 등)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다. <표 3>의 하단에 있는 구조모델의 적합도를 보면, CMIN/DF가 2.451이고 RMSEA도 .034로서 수치들이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전체모델 분석결과



<그림 3> 전체모델 분석결과(유의미한 경로만, ML 표준화 계수)

<표 4> 구조방정식(전체모델) 분석결과

경로	B	S.E.	C.R.	P	β
대학생활어려움 ← 연령	.034	.015	2.321	*	.069
대학생활어려움 ← 성별(여성)	.272	.072	3.781	***	.112
학교소속감 ← 연령	-.020	.007	-3.046	**	-.094
학교소속감 ← 수도권대학	.064	.031	2.059	*	.063
학교소속감 ← 대학생활어려움	-.070	.013	-5.347	***	-.167
인권침해피해 ← 예체능치의계열	.091	.032	2.888	**	.087
인권침해피해 ← 연령	.036	.006	6.241	***	.199
인권침해피해 ← 대학생활어려움	.099	.012	8.181	***	.270
인권침해관련지식 ← 인권침해피해	.270	.047	5.713	***	.195

인권침해관련지식 ← 대학생활어려움	-.040	.015	-2.618	**	-.080
인권침해관련지식 ← 사년제대학	-.141	.042	-3.322	***	-.094
인권침해관련지식 ← 성별(여성)	-.090	.035	-2.563	*	-.073
인권침해관련지식 ← 학교소속감	.420	.043	9.786	***	.350
대학역할가치인식 ← 성별(여성)	.092	.030	3.063	**	.111
대학역할가치인식 ← 대학생활어려움	.060	.013	4.724	***	.177
대학역할가치인식 ← 사립대학	.100	.032	3.145	**	.114
대학역할가치인식 ← 사년제대학	.098	.036	2.689	**	.097
대학역할가치인식 ← 학교소속감	.354	.040	8.911	***	.436
인권보호수준평가 ← 인권침해관련지식	-.067	.027	-2.467	*	-.078
인권보호수준평가 ← 사립대학	-.067	.029	-2.298	*	-.060
인권보호수준평가 ← 대학역할가치인식	.166	.053	3.148	**	.130
인권보호수준평가 ← 인권침해피해	-.274	.037	-7.459	***	-.230
인권보호수준평가 ← 성별(여성)	-.070	.028	-2.499	*	-.066
인권보호수준평가 ← 예체능치의계열	-.064	.032	-1.993	*	-.050
인권보호수준평가 ← 학교소속감	.530	.044	12.073	***	.514

※ 모델적합도: CMIN/DF = 2.277, NFI = .941, CFI = .966, RMSEA = .032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3>과 <표 4>는 외생적 변수들의 효과를 통제된 전체 구조 방정식 모델의 분석결과를 보여준다. 6가지 통제변수들을 추가하였지만, 잠재변수들 간의 관계는 앞의 구조모델 분석결과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그 관계가 매우 안정적임을 알 수 있다. 이제, 통제변수들의 효과를 보면,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대학 생활의 어려움을 더 많이 겪고, 대학의 인권 친화적 교육 기능을 더 중요시하며, 인권침해 관련 지식의 수준이 낮고, 교내에서 자신의 인권 보호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대학 생활의 어려움을 증가시키고, 인권침해피해를 높이며, 학교 소속감은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이 나이가 많아지고 학년이 높아질수록 경제적 어려움은 증가하고, 아르바이트 등 학업 외적 부담의 증가로 인해 학업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지며, 선후배 동기들과의 관계도 소원해지고, 취업 및 진로 고민은 커가는 경향성을 일부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예체능·치의계열 학생들은 인문

사회계열 및 이공계열 학생들에 비해 인권침해 피해를 유의미하게 많이 경험하고, 학내의 인권 보호 수준도 유의하게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전공별 침해피해 수준(평균)을 표준점수로 환산한 자료에 의하면, 예체능·치의계열은 .368이었으나, 인문사회·이공계열은 -.106으로 다소 큰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앞에서 검토한 선행 연구들과 대체로 일치하는 것이지만, 그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구체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현재의 자료로써는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사립대학 학생들은 국공립대학 학생들에 비해 대학의 인권 친화적 교육 기능을 더 중시하지만, 학교의 인권 보호 수준에 대해서는 미흡한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유사하게 사년제 대학 학생들은 전문대 학생들에 비해 대학의 인권 친화적 역할과 가치를 더 중시하지만, 인권침해 관련 지식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수도권대학 학생들은 지방대 학생들에 비해 학교에 대한 소속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의 하단에서 전체모델의 적합도를 보면, CMIN/DF가 2.277이고, RMSEA도 .032로서 매우 좋으며, 전반적으로 구조모델보다 더 향상된 것을 알 수 있다.

4. 직·간접효과의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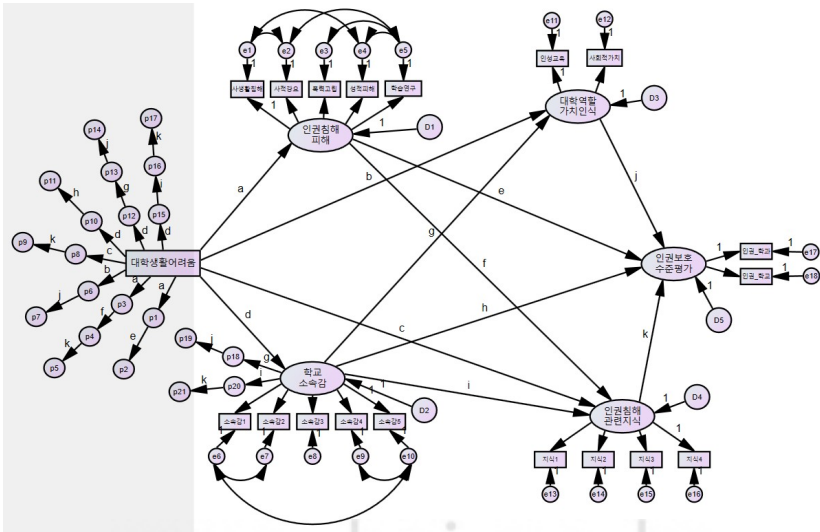
<표 5>는 구조모델의 표준화 계수를 기반으로 잠재변인 간 직·간접효과의 크기를 보여주는데, 이는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에 의한 간접효과의 유의성 검증결과도 함께 보여준다. 먼저, ‘대학생활어려움’의 ‘대학역할가치인식’과 ‘인권보호수준평가’에 대한 간접효과는 유의미하다. 특히 ‘대학생활어려움’의 ‘인권보호수준평가’에 대한 효과는 거의 전부가 간접효과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소속감’의 ‘인권보호수준평가’에 대한 간접효과는 유의미하지 않다. 다음으로, ‘인권침해피해’의 ‘인권보호수준평가’에 대한 간접효과는 미미하지만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p=.021$).

<표 5> 내생변인 간 직·간접효과의 분석(경로모델, 표준화 계수)

독립변수	대학역할 가치인식			인권침해 관련지식			인권보호 수준평가		
	전체 효과	직접 효과	간접 효과	전체 효과	직접 효과	간접 효과	전체 효과	직접 효과	간접 효과
대학생활어려움	.114	.190	-.076**	-.098	-.092	-.006	-.133		-.133**
학교소속감							.541	.514	.026
인권침해피해							-.253	-.239	-.014*

* P < .05 ** P < .01

한편, AMOS 구조방정식에서는 매개변수가 복수인 경우,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간접효과의 전체 규모와 그에 대한 유의성은 알 수 있지만, 개별 매개경로가 갖는 간접효과의 크기와 유의성은 파악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이에 <그림 4>와 같이 팬텀변수들(phantom variables)을 활용하여 개별 경로들의 간접효과 크기 및 유의확률을 분석해 보았다. 팬텀변수는 모델 내에 존재하지만, 모델의 모수나 적합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변수를 의미한다(Ledermann *et al.*, 2011; 우종필, 2022).



<그림 4> 팬텀변수를 활용한 개별 경로들의 유의성 검증

<표 6> 팬텀변수를 활용한 개별 간접효과들의 유의성 검증
(표준화 계수)

경로	간접효과	크기	유의 확률
(1) 대학생활어려움 -> 인권침해피해 -> 인권보호수준평가	.276 * -.239	-.066	.002
(2) 대학생활어려움 -> 인권침해피해 -> 인권침해관련지식 -> 인권보호수준평가	.276 * .190 * -.073	-.004	.020
(3) 대학생활어려움 -> 대학역할가치인식 -> 인권보호수준평가	.190 * .116	.022	.009
(4) 대학생활어려움 -> 인권침해관련지식 -> 인권보호수준평가	-.092 * -.073	.007	.015
(5) 대학생활어려움 -> 학교소속감 -> 대학역할가치인식 -> 인권보호수준평가	-.170 * .445 * .116	-.009	.009
(6) 대학생활어려움 -> 학교소속감 -> 인권보호수준평가	-.170 * .514	-.087	.004
(7) 대학생활어려움 -> 학교소속감 -> 인권침해관련지식 -> 인권보호수준평가	-.170 * .344 * -.073	.004	.022
경로의 합		-.133	.003
(1) 학교소속감 -> 대학역할가치인식 -> 인권보호수준평가	.445 * .116	.051	.009
(2) 학교소속감 -> 인권침해관련지식 -> 인권보호수준평가	.344 * -.073	-.025	.022
경로의 합		.026	.321

<표 5>에서 ‘대학생활어려움’이 ‘인권보호수준평가’에 미치는 효과는 거의 모두가 간접효과였으며 크게 유의미하였다. 그러나 이 간접효과는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에, 이를 팬텀변수를 활용하여 7가지 개별 간접효과 경로별로 세분해서 분석해 보았다. 분석결과(<표 6>), 7가지 간접효과 경로들은 모두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교소속감’의 ‘인권보호수준평가’에 대한 간접효과는 세부 간접효과 경로들에 대한 분석에서도 마찬가지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간접효과의 세부 경로가 갖는 구체적인 의미는 추가 연구를 통해 규명되어야 할 부분이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최근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교내 인권침해 피해와 인권상황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가설적 설명모형을 구성함으로써 탐색해 보았다. 관련 연구의 대부분이 실태조사와 기술적 연구에 한정된 점에 비해, 본 연구는 인권침해 및 인권상황 인식에 대한 설명적, 예측적 분석을 시도함으로써 관련 연구의 지평을 넓힐 수 있기를 기대한다.

분석결과를 구조모형을 중심으로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연구모형과 달리, ‘대학생활어려움 -> 인권보호수준평가,’ ‘학교소속감 -> 인권침해피해,’ ‘인권침해피해 -> 대학역할가치인식’ 경로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2) 학생들이 대학 생활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은 학교 소속감을 약화시키고, 인권침해 피해를 증가시켰다. 또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은 대학의 인권 친화적 역할(교육) 및 가치를 중요하게 인식하지만, 학내의 인권침해 관련 사항들(제도, 대응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무관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에 대한 소속감이 강한 학생들은 대학의 인권 친화적 역할과 가치를 더 중시하고, 인권침해 관련 사항들에 더 관심을 가지며, 학교의 인권보호 수준에 대해서도 더 높이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교에서 인권침해 피해를 경험한 적 있는 학생들은 이로 인해 인권침해 관련 사항들에 대한 지식은 더 많았지만, 인권보호 수준에 대한 평가는 좋지 않았다. 대학의 인권 친화적 역할과 가치를 중시하는 학생들은 학내 인권상황을 양호하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학내의 인권침해 관련 사항들에 대한 지식수준이 높은 학생들은 학교의 인권 보호 수준이 미흡하다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구조모형의 적합도 수치들은 매우 양호하였다. (3) 6가지 외생적 변수들을 통제한 전체모형에서, 잠재변수들 간 관계는 구조모형의 분석결과와 유사하고 그 관계가 매우 안정적이었다. 전체모형의 적합도는 전반적으로 구조모형보다 향상되었다. (4) 경로모형과 팬텀변수를 활용하

여 잠재변인 간 개별 경로들의 간접효과 크기 및 유의확률을 분석해 본 결과, ‘대학생활어려움’의 ‘인권보호수준평가’에 대한 간접효과를 구성하는 7가지 경로 모두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 이상의 연구결과가 주는 정책적 함의는 무엇일까? 그것은 상호 관련된 다음 세 가지로 수렴된다. 우선은, 학생들이 대학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연구결과는 이러한 노력이 곧 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소속감의 제고와 인권침해 피해의 감소로 연결될 것임을 시사한다.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의 많은 부분이 사실 학생 개인적 책임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지만, 가족문제, 이성문제 등 학업 외적인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대학의 상담기구를 통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의 상당 부분은 경제적 어려움에서 올 수 있으므로, 부족하나마 장학제도과 자원을 더욱 확충하여 어려운 학생들에게 더 많은 지원이 주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더욱 중요한 것은 지도교수의 상담 활동과 선·후배 등 동료들과의 건전한 소통을 강화해서 학생들이 학교에 대한 소속감과 구성원 간 유대감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 하겠다.

둘째, 인권침해 피해를 예방하고 침해사건 발생 시 피해자 보호와 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인권침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1차적 범죄예방론적 접근(학교 환경 및 보안장비 개선, 민간도급경비, 학생들의 자경활동 등)이 가능하지만(Brantingham과 Faust, 1976),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대학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인권의식과 인권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도 대학의 인권 친화적 역할과 가치는 학생들의 인권상황 평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므로, 향후 인권 친화적 교육을 대학의 모든 커리큘럼을 관통하는 원리로 삼으면 좋을 것 같다. 특히, 교내 인권침해 피해와 가해에 취약한 집단이 여학생(현재의 데이터는 다소 예외적이지만)과 예체능·치의학계열 학생이므로, 이들에 대해서는 더 많은 관심을 갖고 피해 및 가해 예방

교육과 성평등 및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학내 인권침해 사건 발생 시 피해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나아가 피해회복 및 학업의 유지를 돕고, 동시에 2차, 3차 피해를 예방하는 일이므로, 학교는 본부 차원에서 사건 유형별로 피해자 지원 매뉴얼을 마련해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셋째, 학내 인권기구(인권센터)와 상담센터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최근 고등교육법의 개정으로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건은 대부분 인권센터에서 처리한다. 인권센터의 일차적 업무는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상담, 진정에 대한 조사 및 이와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이지만, 그보다 중요한 임무는 역시 인권침해와 피해를 사전 예방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학내 구성원들 대상으로 인권의식 및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인권센터의 기능 활성화를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관련 제도 및 규정의 표준화, 인력의 전문화와 예산확보의 문제이다. 물론, 학교마다 규모와 조직, 목적과 기능, 인력과 자원이 천차만별이라 규정을 표준화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현재로서는 교육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제공하는 지침에 모호한 부분이 많고, 개별 학교의 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도 많아 인권센터의 일선 업무에 혼선이 잦은 것이 현실이다. 또한, 인권센터 책임자¹⁹⁾ 및 고충상담 인력의 확충과 전문성도 문제가 되는데, 이 문제 역시 사실은 인권센터 운영예산 확보의 문제로 귀착된다. 물론, 고등교육법 제19조3의 ③항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권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아직은 이러한 자금 지원은 지극히 미미하고 난감

19) 김OO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현황’(9월 1일 기준, 국내 4년제 및 전문대학 295교 대상)에 따르면, 인권센터장에 범죄학, 피해자학, 경찰행정학, 상담·심리학, 여성학 등 관련 전공자를 임명한 대학은 전체의 7.12%(21개교)에 그쳤다(<http://www.sisajournal.com>).

한 것이 현실이다.

끝으로, 본 연구는 우리나라 대학생의 인권침해 피해 및 인권상황 평가를 설명·예측하기 위한 가설적 연구모델을 제시하고 통계적 검증을 시도하였으나, 그것이 어떤 선행 이론을 검증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사실, 문헌에서 인권침해 피해와 인권상황 인식을 예측해주는 의미 있는 이론적 모델은 찾아보기 어려우며, 본 연구가 활용한 데이터도 어떠한 이론적 모델에 기반한 것은 아니다. 다만, 유사 선행 연구가 부재한 상황에서 이차적 자료(secondary data)의 분석이 갖는 본질적 한계(횡단적 자료이고, 예측 잠재력을 갖는 가용한 개념 및 변수가 부족한 점 등)를 감수하고라도 이러한 시도를 해 보았다는 것은 그대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가 제시한 설명모형은 어디까지나 시론적이고 가용한 데이터 수준에 맞춘 사후적인(ad hoc) 것이므로 향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다른 대규모 표본 데이터가 가용한 상황이 온다면 본 연구에서 제안된 개념 및 모델을 재검증하고 재구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리라 본다. 더불어, 대학에서 인권침해의 문제가 더 심각할 수 있는 부분은 교수-대학원생 간의 불균등한 권력관계에서 오는 사례들(랩실에서의 인권침해 문제 등)이라고 할 것이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대학원생 집단을 대상으로 한 분석을 따로 해 보면 유익하리라 생각한다.

(논문접수일: 2023. 11. 13, 논문심사일: 2023. 12. 07, 게재확정일: 2023. 12. 16)

참고문헌

- 경북대학교. 2022. 『대학 내 인권침해 피해경험 실태조사 문항 개발 연구 보고서』.
- 고영완·안병수·이강우. 2015. “대학운동부 공간과 폭력문화의 재생산 담론.” 『한국사회체육학회지』 60: 69-79.
- 교육부. 2022. 『2022 캠퍼스 성범죄 보고서』.
- 국가인권위원회. 2016. 『국민인권의식조사』.
- 김영미. 2016. “청소년의 폭력피해경험과 인권의식: 우울과 자기인권평가의 매개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12): 267-280.
- 류지현·허창영. 2008. “대학생의 인권인식에 대한 요인분석 및 인권태도의 인식수준.” 『민주주의와 인권』 8(1): 175-201.
- 류태호 외. 2010. 『국가인권위원회 운동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 대학교 학생선수를 중심으로』. 국가인권위원회.
- 박상준·임태승. 2010. “초등학생의 인권인식 발달에 관한 연구: 인권판단력 발달을 중심으로.” 『법과 인권교육 연구』 3(2): 39-58.
-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2018. 『서울대학교 학생 성폭력·인권침해 실태조사』.
- 심태은·이송이. 2018. “대학생의 인권감수성 수준과 인권인식 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9(10): 352-360.
- 양영미·김진석. 2023. “청소년 인권의식과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의 관계.” 『사회복지연구』 54(1): 69-90.
- 우종필. 2022. 『구조방정식모델 개념과 이해』. 한나래.
- 유성렬·김신영. 2013. 『청소년의 인권의식과 태도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육주현·신형진. 2020. “인권의식 구성요소 간의 상관관계와 영향요인 분석.”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13(2): 211-243.
- 이동욱. 2023. “청소년의 인권인식에 미치는 의사결정시 부모태도, 학교생활만족도, 자아존중감 간의 구조적 영향관계.” 『한국과 국제사회』 7(4): 225-256.
- 이미정 외. 2019. 『미투운동 이후 문화예술계 대학생의 성폭력 피해 현황과 향후 대응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이정연 외. 2020. “학생의 인권의식에 대한 영향요인 탐색.” 『인격교육』 14(4): 85-104.
- 이화영 외. 2018. 『의과대학 학생들의 인권상황 실태조사』. 인권의학연구소 및 국가인권위원회.
- 장다혜·추지현·김석호. 2019. 『대학 내 폭력 및 인권침해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정병은. 2013. “인권의식조사.” 정진성 외. 『인권사회학』. 다산. Pp. 100-135.
- 정은아. 2022. 『청소년의 차별피해경험이 인권의식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만족도의 매개효과』. 한세대학교 박사논문.
- 정은아·백진아. 2023. “청소년의 차별피해경험과 인권의식 간의 관계: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만족도의 매개효과.”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12(4): 265-289.
- 정향미. 2004. “남녀 대학생의 성희롱 피해, 가해 경험과 영향요인 분석.” 『아동간호학회지』 10(3): 291-299.
- 하경희·강병철. 2009. “대학생의 인권태도에 대한 탐색적 연구: 사회복지 전공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0(2): 183-202.
- Brantingham, P. J. and F. L. Faust. 1976. “A Conceptual Model of Crime Prevention.” *Crime and Delinquency* 22: 284-296.
- Cohen, Lawrence and Marcus Felson. 1979. “Social Change and Crime Rate Trends: A Routine Activities Approach.”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4: 588-608.
- Downey, G. et al. 1998. “Rejection Sensitivity and Children’s Interpersonal Difficulties.” *Child Development* 69(4): 1074-1091.
- Gibb, E. B. 2002. “Child Maltreatment and Negative Cognitive Style: A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Review.” *Clinical Psychological Review* 22: 223-246.
- Kohlberg, L. 1984. *The Psychology of Moral Development*. Harper and Row.
- Ledermann, T. et al. 2011. “Assessing Mediation in Dyadic Data Using the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18(4): 595-612.
- Narvaez, D. and J. Rest. 1995. “The Four Components of Acting Morally.” In W. Kurtines and J. Gewirtz (Eds.). *Moral Behavior and Moral*

Development: An Introduction, Pp. 385-400. New York: McGraw-Hill.

Rosen, P. J. *et al.* 2007. "Victims of Their Own Cognitions: Implicit Social Cognitions, Emotional Distress, and Peer Victimization." *J.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28: 211-226.

<Abstract>

**Factors Affecting Human Rights Violation Victimization
and Human Rights Condition Evaluation among
Korean College Students
: Testing a Hypothetical Explanatory Model**

Lee, Min-Sik*

This study explored the factors affecting human rights violations and human rights condition evaluations among Korean university students, by testing a hypothetical explanatory model. To this end, survey data produced from the “Study on the Violence and Human Rights Violation in University Campus and Human Rights Improvement Plan” by the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2019) were analyzed. As the result of the AMO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is, various difficulties that students experience in college life weakened their sense of belonging to school and increased the damage of human rights violations. In addition, students who have difficulties in college life recognize the human rights-friendly role and value of universities as important, but are relatively indifferent to the information (systems, responses, etc. of their schools) related to human rights violations. Students with a strong sense of belonging to schools value the human rights-friendly role and value of universities, are more interested in human rights violations, and appreciate the level of human rights protection of schools. However, students who

* Professor, Dept. of Police Administration, Kyonggi Univ. / Lmspu@kyonggi.ac.kr

had experienced human rights violation in schools had more knowledge of human rights violations, but were less aware of the level of human rights protection. Students who value the human rights-friendly role and value of universities tended to evaluate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school well, but students with a high level of knowledge of human rights violations in the school tended to evaluate the level of human rights protection in the school. Even in the overall model that controlled exogenous variables, these relationships between latent variables were very stable and the goodness-of-fit of the model was improved by some parts compared to the structural model. In addition, phantom variables were used to analyze the magnitude and significance level of indirect effects of individual paths between latent variables, and finally, policy implications based on research results were discussed.

Keywords: College Students, School Belonging, Human Rights Abuse, Perceived Human Rights Level, Structural Equation Modeling